

새로운 주체와 실천에 대하여¹⁾

김혜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와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에 대해서 첫 번째 발제문은 대공장 노동자들의 한계에 주목하고 진정한 프롤레타리아로서 불안정노동자에 주목한다. 두 번째 발제문에서는 ‘노동조합’의 한계에 주목하여 그 구조를 뛰어넘는 ‘노동자 평의회’를 주장한다. 첫 번째 발제문은 새로운 운동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고민한다면, 두 번째 발제는 새로운 운동주체를 세우는 형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발제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새로운 주체로서 불안정노동자들에 주목해야 하고,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대공장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노동조합을 뛰어넘는 운동이 ‘노동자평의회’라는 형식으로 가능

1) 이 글은 작년 여름에 개최된 『붉은글씨』 창간기념 토론회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실천》에서 토론자로 초대된 김혜진 동지가 두 발제문(「탈공업화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 (이정인)」과 「노동조합을 넘어서 새로운 노동자 운동을 제안하며 (정현철)」)에 대해 토론문으로 제출한 글이다.

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의 대공장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중간계급인가?

발제문에서는 ‘대공장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중간계급이고, 이들이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대공장 노동자들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보수적 태도를 보면 그럴 수 있으나 그 노동자들의 보수성은 왜 발생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보수화는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되었다. 경제위기 시기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이후 대공장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안’이다. 이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은 산업과 특근으로 인한 것이며,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때로는 전투적인 투쟁도 만든다. 안정성이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불안정성을 만드는 구조에 대한 집단적인 투쟁도 가능한 것 아닌가?

대공장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자기 보존적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가 노동자 일반과 비교될만큼 다른 것도 아니며, 노동조합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우 사회·정치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대공장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신중간계급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다. 서유럽에서 식민지 수탈과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노동자들과 한국 대공장 노동자들의 상태를 쉽게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 대공장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불안정성의

원인을 숙고하고, 일시적으로나마 누리고 있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넘어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투쟁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쉽지 않다. 설령 그것이 ‘불안’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공장이나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보수화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자본도 노동자들의 위계화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므로 이 노동자들을 다시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임금의 안정성도 무너지고 정리해고가 일반화되는 상황을 보면, 대공장과 공공부문이 누렸던 일시적 안정성의 기반이 파탄날 수 있고, 이 때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제대로 된 투쟁으로 끌고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때이다.

‘평의회’의 정신은 형식을 뛰어넘어 발현된다.

한국사회 대공장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이 계급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발제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노동자들을 가두고, 시스템에 의거하여 개인들의 투쟁과 분노를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료성은 단지 노동조합 관료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보수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상태가 ‘관료성’이라는 형태로 대변되는 것이다. 투쟁을 통한 변화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이 수세에 몰려있고 현재의 조건을 깨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운동의 전망을 보여주고 연대의 확장, 노동자계급

의 정체성 확대, 투쟁을 통한 훈련 등을 조직해가는 계급정당의 부재도 한 몫 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한계적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를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의 한계에서 찾는 것도 한계적이다.

민주노총 안의 투쟁사업장들은 발제문에서 이야기하는 평의회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총회에 의해 구성되고, 일상적인 투쟁의 과정에 놓여있다. 물론 이 투쟁사업장도 노동조합의 상층의 개입에 의해 그 평의회적 성격이 훼손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매우 역동적인 형태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발제문에서는 일상의 시기에서는 비공인파업을 통해서 평의회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노동조합 구조에서는 비공인파업의 조직은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평의회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일 게다. 하지만 최근에 생겨나는 노조의 양상은 조금 다르다. 복수노조 하 소수노조나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이러저러한 유니온들은 기존 제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 파업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비공인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으나 노동조합이라는 체제 내적 보호장치가 가동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비공인파업의 성격을 갖고 투쟁을 일상화하는 노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바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평의회!’라는 형식이 아니라,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투쟁하는 이들, 기본의 노조 조직에서 제대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불안정노동자들, 그리고 장기투쟁을 하는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총회의 문제의식, 그리고 일상의 시기에 투쟁이 어떻게 확산되고 연대로 나아가고,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의식적인 투

쟁들이 운동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러한 투쟁이 쉽게 지치거나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그 운동의 의미를 확장하고, 이 투쟁이 지금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불안정노동자들은 과연 혁명적일 수 있는가?

발제문에서는 불안정노동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공업노동자와는 다른 실체로서 저임금과 불안정이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실체를 가진 사회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계급적 실체로 등장하려면 집단적인 조직화와 투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제문에서 지적하듯이 불안정노동자들은 조직이 쉽지 않다. 기존의 노동조합 틀이 기업별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업 안에서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임금과 단체협약이라는 형태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의 투쟁 패턴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 불안정노동자들은 쉽게 해고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한 안정화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노조 조직화 방식으로는 조직화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발제문에서도 지역과 생활의 코드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치운동으로의 결합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정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는 것은 노조 조직형태 때문만은 아니다. 복잡한 고용형태는 누구를 상대로 투쟁해야 하는지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도

어렵고,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없애는 구조는 대단히 복잡하고 숨겨져있다.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기에는 그 벽이 너무 커보인다. 전반적인 삶의 불안정성은 노동자들이 생존에만 매달리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나 모이거나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더 어렵고, 그래서 분노와 불만을 사회적 약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터뜨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더 보수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파시즘의 논리에 동원되기도 한다.

주체로 형성된다 함은 한편으로는 의식적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생적인 투쟁의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집단적인 힘으로 모여야 한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현실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최저임금 투쟁’의 경우에도 다들 바라보기만 하지 주체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단지 투쟁 방식의 문제일까. 투쟁 의제를 확장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일까. 실질적인 전망 형성은 가능한가. 이미 불안정성이 너무 강해지면 그것에 오히려 종속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지금 우리에게서 불안정노동자들이 새로운 운동 주체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불안정노동자들의 분노를 집단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적인 노력이다.

새로운 주체 형성과 실천에 대한 간략한 의견

운동에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고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조직화가 정말로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복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 지금까지 조직된 대공장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그리고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업종노조는 초기의 역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쉽게 노동조합의 관성적 방식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새로운 주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주체 형성의 문제의식으로 제기된 비정규직 조직화 (사내하청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 주체의 형성이라는 고민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수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으로 진입한 대공장 사내하청 운동이 그러하다. 그 때의 문제의식은 대공장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의 가능성을 만들고, 점차로 관료화되고 있는 대공장운동을 혁신하자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현대자동차, GM대우, 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철도노조 등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졌고, 지난 10년간 치열한 투쟁을 해왔다. 그 투쟁이 정규직 중심의 운동에 문제제기를 던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라는 운동의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운동이 과연 애초에 목표했던 새로운 주체 형성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대공장 사내하청이 조직된 것은 대규모로 집단노동을 한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정규직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확대한 사측

의 관리전략도 중요하게 기능했다. 대공장은 노동자들을 공장 안으로 잡아두는 장치가 필요한데, 대공장 사내하청은 임금수준이 낮지만 잔업과 특근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저임금을 상쇄할 수 있었다. 이런 점으로 젊은 남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갖고 공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본이 원하는 유연성은 사내하청을 1차 하청과 2차 하청 등으로 분리함으로써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장 사내하청이 대공장 정규직과는 다르게 단결의 가능성을 만들고, 계급적 주체로서 나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힘을 정치적인 투쟁으로 전환시킬 뿐 아니라 불안정한 2차와 3차 하청 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며, 자신들의 투쟁으로 다른 불안정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의 사내하청 운동은 정규직노동자들과의 비교 속에서 1차 하청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내하청 투쟁은 ‘불법파견’을 통한 ‘정규직화’ 투쟁으로 조직되었다. 치열한 투쟁에 밀린 자본은 강도 높은 탄압과 더불어 ‘신규채용’이라는 카드를 들이밀면서 노동자들을 흔들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요구를 수용하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체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요구를 살리면서 싸우고 있지만 교섭이 현실화되면서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고 금속노조도 오히려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흔들림은 자본의 강도 높은 탄압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규직으로의 ‘신분상승’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동안 사내하청운동의 방향이 ‘정규직화’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영세사업장 사내하청 문제나, 대공장 납품업체들의 사내하청 문제로까지 확장해오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

대공장은 하청업체들에 대한 수탈을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일정한

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수 있는 기반도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서는 양보와 탄압이라는 양자의 칼날을 다 휘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양보 범주에 들어있는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전체 사내하청의 투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공장’이라는 특수성에 얽매인다. 대공장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고용구조와 저임금을 상쇄하는 장시간 노동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된다. ‘불법파견’이라는 가능성이 눈에 보일 때 집단적 조직화가 가능했지만 그것은 또한 양날의 칼이 되어서 투쟁을 자신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투쟁과 조직화의 방향을 초기에 어떻게 세우는가가 중요하다. ‘비정규직’과 ‘차별’이라는 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원하청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문제의식이 확장되어 있었다면 사내하청 운동의 지향을 ‘불법파견 정규직화’ 운동보다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나 부품업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단결의 가능성에 보다 주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내하청 운동이 대공장 운동에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던져주었으나 이것이 여전히 정규직과의 비교나 정규직화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정규직들에게는 ‘운동적인 연대’보다는 시혜로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대공장 운동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대공장 내부의 사내하청 문제만이 아니라, 하청계열화로 인한 대공장의 수탈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등 대공장 운동 전반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대공장 정규직 활동가들이 제대로 하지 않

있다는 질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공장 사내하청 운동을 함께 조직해왔던 단위들의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공장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의 재조직화 가능성

새로운 운동의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많이 조직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위적인 활동가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주체형성이라 함은 결정적인 시기에 세상을 변혁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의식을 가진 대중적인 집단 투쟁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이 축적하게 하고, 변혁 이후 노동자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힘과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이 대중적으로 많아져야 한다. 이 투쟁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어야 하고 자신의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투쟁을 우리는 권리의식의 확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권리의식의 확장이란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대공장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때로는 그 투쟁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소한 자기 이해로 갇히기 일쑤이다. 그런 점에서 현시기 대공장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핵심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사회의 전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훈련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주체화는 단지 결정적인 투쟁을

위해서만도 아니다. 평의회 건설의 문제의식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신들의 공간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이후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통제의 핵심 부분인 대공장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지난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은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자본의 분할전략이 너무나 잘 먹히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맞서 전투적인 투쟁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역시 쉽게 사그라들고 자신의 좁은 이익으로 회귀하기도 한다. 이 투쟁을 그렇지 않게 만드는 활동가들의 노력도 중요할 것이고 바로 그 과정에서 평의회 문제의식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을 다시 계급전선에 세우는 것은 그 노동자들을 열심히 조직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해서 대공장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단결을 촉구했듯이 대공장과 연계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조직화,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그리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해서 역동적인 운동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형성된 계급전선을 통해 대공장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강제하여 이 전선에 세우는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운동 주체는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대공장에서 하청계열화된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에 주목해야 한

다.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수탈로 인해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단위 조직화를 선호하지도 않는다. 저임금으로 인해 잔업과 특근을 따라 회사를 이동한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단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변화에 대한 기대치는 낮고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그렇지만 현실의 불만이 가장 농축되어 있고, 지역중심으로 집단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즉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지역파업과 지역협약)하는 지역이 생긴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는 확산될 것이다. 그런 열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투쟁 과정에서 더 하위 위계인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중요하고, 개별의 권리를 넘어선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까지 투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도 주목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보육과 교육, 의료서비스 등 노동자들에게 당연하게 지불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시장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 산업에 자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양산했다. 사회서비스가 변혁 이후의 사회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처럼 시장화되어 있고 왜곡된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보자는 제기와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쉽게 조직되기는 어렵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 접근되며, 대정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과 '생활'을 결합한 정치적인 투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 제도화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간접고용을 선호하지만 제조업에서의 사내하청 운동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형태로 한 시기를 마감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전투적이었던 투쟁의 여러 단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한 채 소위 ‘진성도급’이라는 이름으로 고용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많이 착취당하는 비정규직들의 경우 여전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한 번의 사내하청 운동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새롭게 주체를 형성하면서 운동의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은 “공공부문이 왜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민간위탁,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구조가 그 공공성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간위탁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화, 그리고 무기계약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지 그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만의 몫으로 남지 않고 그것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로 발전하고, 정부의 정책과 지침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그럴 때 이 운동도 계급적인 성격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고 주체의 형성도 가능하다.

어떻게 조직화를 시작할 것인가?

발제문에서는 정치적인 것,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의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촛불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서의 부조리를 깨닫고 집단적인 저항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하고 적극 조직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투쟁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고, 실령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급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주체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노동권을 보편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의 이윤 창출이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권리'가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드러내고 '노동권'이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투쟁'이 중요하다. 자칫 정치적인 조직화는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를 '국가책임'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투쟁'이라는 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버티는 것처럼, 그리고 철거민들의 투쟁이 정부에 대한 투쟁을 넘어 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자본에 대한 공격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때, 전면적으로 이 자본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왜곡하는지에 대한 폭로를 해야 하고, 대기업에 맞서는 사회적 투쟁을 조직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불안정노동자들을 조직할 때에는 처음부터 공장의 담벼락을 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공장의 담벼락을 넘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투쟁이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의미이다. 민주노총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로남부와 인천공항을 전략조직사업지로 선정했다. 두 곳 모두 개별사업장을 넘어 지역노조를 만든다는 전망을 갖다. 이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도 대규모 집단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자평의회로 노동자들을 조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업단위를 넘어서서 조직되어야 한다. 기업단위 활동을 뛰어넘어 '지역'과 '생활'로 가야 하지만 이것은 투쟁의 대상을 확장한다는 의미여야 한다. 기업단위로 조직하고 투쟁할 때에는 사용자가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관계도 중층화되어 있고 정부의 개입도 일상적이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할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생활'로 키워드를 옮기는 것은 투쟁의 수위와 방식을 달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투쟁의 대상을 우리의 일상에 개입해있는 자본,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자체 등으로도 확장해나간다는 의미여야 한다.

새로운 주체와 실천은 계급정당 건설과 함께!

새로운 주체 형성이 계급정당 건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대중조직을 만들고 투쟁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투쟁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주체들의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형성되는 주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 획득으로만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야 정치권에 기대거나 혹은 그 영역에 대한 자기 고민을 포기하기도 한다. 새롭게 형성되는 주체들이 부여하는 긴장과 투쟁에 힘입어 기존 민주노조운동의 주

체들이었던 대공장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재조직화되고, 단결을 현실
해야 한다. 해방의 기획을 위해서 새로운 주체를 세우고 주체들이 만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조직하며, 각 투쟁의 전망과 지향을 만들어야 한
다. 계급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러한 주체 형성 과정에 개
입하고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또한 계급정당 건설 과정에서
역동성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